



세기의 '이혼 소송' 최태원 손들어줬다

대법, 1.4조 재산분할 파기환송
"盧비자금 재산 기여 인정 못해"
위자료 20억 지급은 최종 확정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대법원이 노태우정부 비자금의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재산 분할금 규모를 다시 책정하게 됐다.

대법원 1부는 16일 열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에서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 판결의 최대 쟁점은 재산 분할금이다. 이혼 소송 1심에서는 재산 분할금 규모가 665억 원에 그쳤으나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어머니인 고(故) 김옥순 여사가 남긴 메모지가 증거로 인정되면서 재산 분할금이 크게 뛰었다.

상고심에서는 노태우정부가 선경(SK그룹의 전 이름)그룹에 비자금 300억 원을 제공했고 이 돈이 그룹 성장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부부 공동 재산인 4조115억 원 중 35%에 해당하는 1조3808억 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SK그룹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렸고 불법 비자금에 따른 이익을 국고에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 분할금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논란도 컸다.

최 회장 측도 해당 판결이 단순한 재산 분할의 문제가 아니라 SK그룹의 명예를 실추했다고 주장하며 강력히 반발한 바 있다.

대법원은 노태우 정부의 비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기여분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불법 자금이 재산 분할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1991년경 최종 현 선대 회장에 300억 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했다고 해도 이 돈의 출처는 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적이고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재산분할 주요 쟁점 상고심 판단



보호 가치가 없는 이상 이를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잠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근 최 회장 측 변호사는 "항소심 판결 배경으로 작용했던 'SK가 노태우 정권 비자금을 통해 성장했다'는 부분에 대해 대법원이 명확하게 잘못이라고 한 게 큰 의미"라며 "이런 주장에 대한 억측이나 오해가 해소할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SK그룹 측에도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으나 특별히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없으며 변호인단 측의 입장을 참고하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대법원이 노 관장의 재산 기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고등법원이 재산 분할금을 재책정할 예정이다. 재산 분할금이 1조3808억 원으로 증가한 근거가 노태우정부 비자금이었던 만큼 재산 분할금 규모가 작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법원은 최 회장이 동생인 최태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 증여한 재산을 재산 분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이혼 소송 제기 당시 이미 처분한 재산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한편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는 것은 확정됐다.

대법원은 "이 판단에 위자료 액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재량의 한계를 일탈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양준규 기자jgyang@skyedaily.com

김현지 허위 보도... 한미일보 고발 '철폐'

민주 "혼외자출산악의적보도" 익명 제보 근거 가짜뉴스 유포 "개인인격 살인자 공당 테러 반사회적 중대 범죄 단호 대응"

더불어민주당이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허위·조작 보도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미일보를 형사 고발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위원장 김현전

용기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대상으로 허위사실을 반복 보도한 한미일보 기사와 칼럼 작성자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일보의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 살인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이러한 악의적 언론 행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가 질서를 흔드는 반사회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한미일보가 12일과 13일 연이어 게재한 기사와 칼럼을 통해 김 제1부속실장을 향해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 남용, 간첩 의혹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이 위원회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해당 기사들은 사실관계 확인은커녕 익명의 제보와 음모론적 추측을 마치 진실인 양 포장했다"며 "이는 명백한 '거짓의 적시'이자 비방 목적의 명예 훼손 행위로,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이 규정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언론의 자유는 결코 허위와 조작의 자유가 아니다. 자유라는 이름 아래 타인의 명예를 짓밟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라는 주장이 있다' '~의 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는 문구 뒤에 숨어 익명의 소문을 반복 전파하며 사실상 허위의 확산범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히 간첩 의혹과 같은 중대한 범죄 혐의를 제기하면서도 단 하나의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혼란을 의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은 보도가 아니고 선동이며 언론이 아닌 정치공작의 도구로 전략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일보는 과거 '99명 간첩단 사건'이라는 허위 보도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는 기자가 스카이데일리를 퇴직한 후 강간한 매체다.

이후 스카이데일리 경영진과 편집인은 그동안 '중국 간첩단 사건' 등 허위사실을 보도했던 내부 극우세력을 완전히 청산하고, 실용주의 노선에 기반한 건강한 언론으로 거듭나기 위해 지속적인 논의와 실행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이후 스카이데일리 내부 극우 성향의 편집라인과 기자들은 스카이데일리를 떠나도록 했으며, 건강한 언론관을 갖춘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김진강 기자 kjk2156@skyedaily.com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인 김 현(왼쪽), 전용기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경찰청 민원봉사실 앞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허위 조작 보도를 한 한미일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앞서 한미일보는 13일자 기사에서 김 실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의 부적절한 관계설 △미성년 자녀 관련 주장 △북한 인사와의 연관 의혹 등을 나열하며 사생활 루머를 보도했다. 박미나 기자

韓·美 관세협상 급류... 타결 청신호

통상 4인방 美 워싱턴 총출동 APEC 회담 이전 타결 총력전 3500억 달러 투자 조율 순조 베센트 "협상 거의 매듭 단계"

한-미 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관세협상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비롯해 김경관 산업통상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31일-11월1일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전 타결을 위한 총력전이 펼쳐지고 있다.

김 실장은 16일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회견과 만나 "김정관 장관이 하워드 루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 일정을 잡았다"며 "한자리에서 입장을 조율하고 협상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동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도 재무부, 상무부, 무역대표부(USTR) 등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협상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협상에는 구 부총리가 스톡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여 본부장이 제이미 스톰리 USTR 대표와 각각 별도 협상

을 진행한다. 이번 협상의 핵심 쟁점은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 방식과 외환시장 안전장치 마련이다. 김 장관은 구체적 협상안에 대해 "진행 중인 사안이라 언급하기 어렵다"면서도 "외환시장 관련 여러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오해나 이해의 간극이 좁혀졌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 역시 워싱턴DC 달레스 국제공항에서 "양국이 빠른 속도로 조율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며 "미국이 우리 외환시장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우리 가 제안한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도 같은 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향후 10일 내로 무언가를 예상한다"고 밝혀,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오는 APEC 정상회의를 협상 타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은 "APEC은 두 정상이 만나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시기를 예단해 협상하지 않겠다"며 "국익과 국민 이해에 맞게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센트 장관 역시 CNBC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현재 세부사항들을 조율 중"이라고 했다.

장혜원 기자 hjyang@skyedaily.com

부자의 길을 함께 갑니다 대한민국 첫 '부의 지도' 서비스

부자의 성(城)

서초 강남 용산 SKY!!!

스카이데일리가 새로운 부의 길을

놓습니다

누구나 그 길을 갑니다

존경 받는 부자의 모습입니다

